오바마-매케인 경제문제 극명한 시각차

미국 대선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 버락 오바마(사진 왼쪽)와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경제문제를 두고 날카로운 시각차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오바마는 급증하는 재정 적자를 두고 월스트리트와 백악관의 무책임한 결정들을 비판하고 나섰고 매케인 진영은 오바마의 세금인상 정책이 경제를 망가뜨릴 것이라고 맞섰다.

"부시 정부가 재정 적자 키워"
"증세정책 경제 망가뜨릴 것"

민주당의 오바마 상원의원은 28일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부시 행정부가 미국의 재정적자가 2009 회계연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4천82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자 긴급 소집된 간담회로,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인 폴 볼커와 구글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워런 버핏도 전화통화로 참여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시민들은 경제 문제를 대선의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바마는 간담회에서 "실업률 증가, 임금 하락, 신용경색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위협 등 우리가 당면한 도전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진로를 바꿔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온 것은 역사도, 우연도, 경기변동의 정상적인 사이클도 아니다"면서 월스트리트와 백악관에서 만들어진 무책임한 결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해외 순방에서 세계 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나며 외교문제에 치중해온 오바마는 이후 고유가와 부동산. 금융문제 등 경제문제에 중점을 두고 싶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매케인 진영도 오바마의 경제문제 치중 방침을 경계하며 경제자문역들의 전화회의를 소집했다.

매케인의 경제자문역인 HP의 전 CEO 칼리 피오리나는 기자들에게 "미국 시민들이 버락 오바마의 정치 쇼에 현혹되고 있다. 그러나 매케인은 경제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오랜 기간 조언을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침체기에 세금을 올리고 자유무역을 막는다면 나쁜 경제는 더욱 악화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는 이것을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으며 이는 오바마가 하고 있는 그런 제안들"이라고 말했다.

매케인의 경제자문역인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도 "오바마의 계획은 투자자와 개인에 대한 세금을 올려 경제를 둔화시키고 침체시킬 것"이라며 "세금 인상 계획은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가 2010년이나 2011년 세금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약속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경제를 둔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美대선 민주 부통령후보 팀 케인 급부상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러닝 메이트 최종 후보 중 1명으로 팀 케인(50) 버지니아주지사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미국의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29일 보도했다.

최근 오바마의 고위 보좌관에게 케인에 대해 조언한 한 인사는 "케인이 일찍부터 오바마를 지지해온 인사로 후보자 명단에서 매우, 매우 높은 위치에 올라 있다"고 말했다.

현재 케인은 케슬린 시벨리우스 캔자스 주지사, 샘 넌 전조지아주 상원의원 등과 함께 후보군에 올라 있다.

오바마 선거운동본부 대변인인 빌 버튼은 부통령 후보 지명 과정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DDA협상 美·中·印 비난전 G7회의 입장차만 확인

도하개발어젠더(DDA) 무역협상이 막바지 난항을 겪고 있다.

30여개 주요국 통상각료들은 지난 25일 농업 및 비농산물(NAMA) 분야의 자유화세부원칙들(modalities)에 관한 잠정 타협안을 마련하는 등 중대한 전기를 마련했으나, 일부 남은 쟁점을 놓고 28일 미국과 인도·중국이 재격돌하면서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미국과 인도·중국은 153개 전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이날 오전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주재로 열린 무역협상위원회(TNC) 회의에서 비난을 주고받은 데 이어 이날 오후 G7(7대 무역국) 회의에서도 날카롭게 대립했다.

G7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브라질, 인도, 중국은 이날 정오부터 5시간 동안 별도 회동을 갖고 ▲농업분야의 개도국 긴급수입관세(SSM) 발동요건 완화 ▲개도국의 분야별 자유화협상 참여 ▲미국의 면화 보조금 삭감 ▲공산품 분야에서 WTO 최근 가입국 대우 등의 남은 쟁점들을 놓고 집중 협상을 벌였으나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했다.

이들 '정치적' 쟁점 이외에 ▲농업분야의 저율관세 의무수입량(TRQ) 신설 ▲관세 단순화 ▲미국의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블루박스(생산제한계획하의 보조) ▲품목별 AMS(우루과이라운드 감축대상 보조) 상한 등 9개 쟁점이 남았다. G7은 협상 중단을 선언하지 않고 29일 오후 다시 만나기로 해 주목된다.

이에 앞서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G7회의가 잠시 중단된 틈을 이용해 기자회견을 갖고 인도와 중국을 겨냥, "몇몇 나라들이 25일 합의한 타협안을 선별적으로 다시 열고자 한다"면서 "이는 우리가 달성했던 미묘한 균형을 실제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며, 그 것이 이번 라운드(DDA)의 성과를 위험에 빠뜨릴 것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카말 나스 인도 상업장관은 "DDA 협상을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빈곤 감축보다는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대 선진국들"이라고 비난하고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낙관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통가 국왕 대관식 28일 남태평양의 통가 왕국 수도 누쿠알로파에서 전통의상을 입은 여학생들이 국왕 조지 투푸 5세의 대관식을 축하하는 춤을 추고 있다. 투푸 5세는 지난 2006년 왕위를 물려 받았으나, 민주화 시위 등으로 내정이 불안해 18개월 동안 대관식을 미뤄왔다. /연합뉴스

EU, 800만유로 규모 대북 농업지원사업

유럽연합(EU)이 오는 9월부터 2년간 800만유로 규모의 대북 농업지원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29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유럽연합위원회 지원국의 아시아 담당자의 말을 인용, "9월부터 총800만 유로를 지원해 북한의 농업 생산량 증대를 돕기 위한 '식량안보 사업'을 시작한다"며 "이 사업에 6개 비정부기구(NGO)가 참가를 신청했으며 오는 9월 최종 조인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식량안보 사업'이란 식량을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종자나 농업 기술을 지원해 농업 생산량 증대를 돕는 장기적인 계획이다.

이들 6개 NGO는 독일의 '저먼 애그로 액션', 영국의 '세이브 더 칠드런', 아일랜드의 '컨선 월드와이드', 프랑스의 '트라이앵글'과 '프리미어 어전스' 등 북한에 사무소를 둔 5개 NGO와 벨기에에 본부를 둔 '핸디캡 인터내셔널'이다.

이들 단체는 북한 당국의 허가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식량안보 사업을 벌일 현장에 대한 실사까지 마쳤다고 방송은 전했다. /연합뉴스

北, 비동맹회의서도 '10·4선언' 이행 제기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이어…합의문 반영 노력

북한이 이란 테헤란에서 열리고 있는 비동맹운동(NAM) 장관급회의(27~30일)에서 '10·4 정상선언 지지'를 합의문서에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5일 오준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약실장을 현지에 파견, 합의문서에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가국들을 설득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9일 "북한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이어 비동맹회의에서도 10·4선언을 합의문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국제회의를 통해 10·4선언 이행에 대한 국제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비동맹회의는 2006년 정상회의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담는 등 그동안 남북 간 주요 합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혀와 이번에도 '10·4선언'이 합의문에 반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 당국자는 "정부도 '10·4선언'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10·4선언이 남북기본합의서 등 다른 합의들과 함께 모두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참가국들에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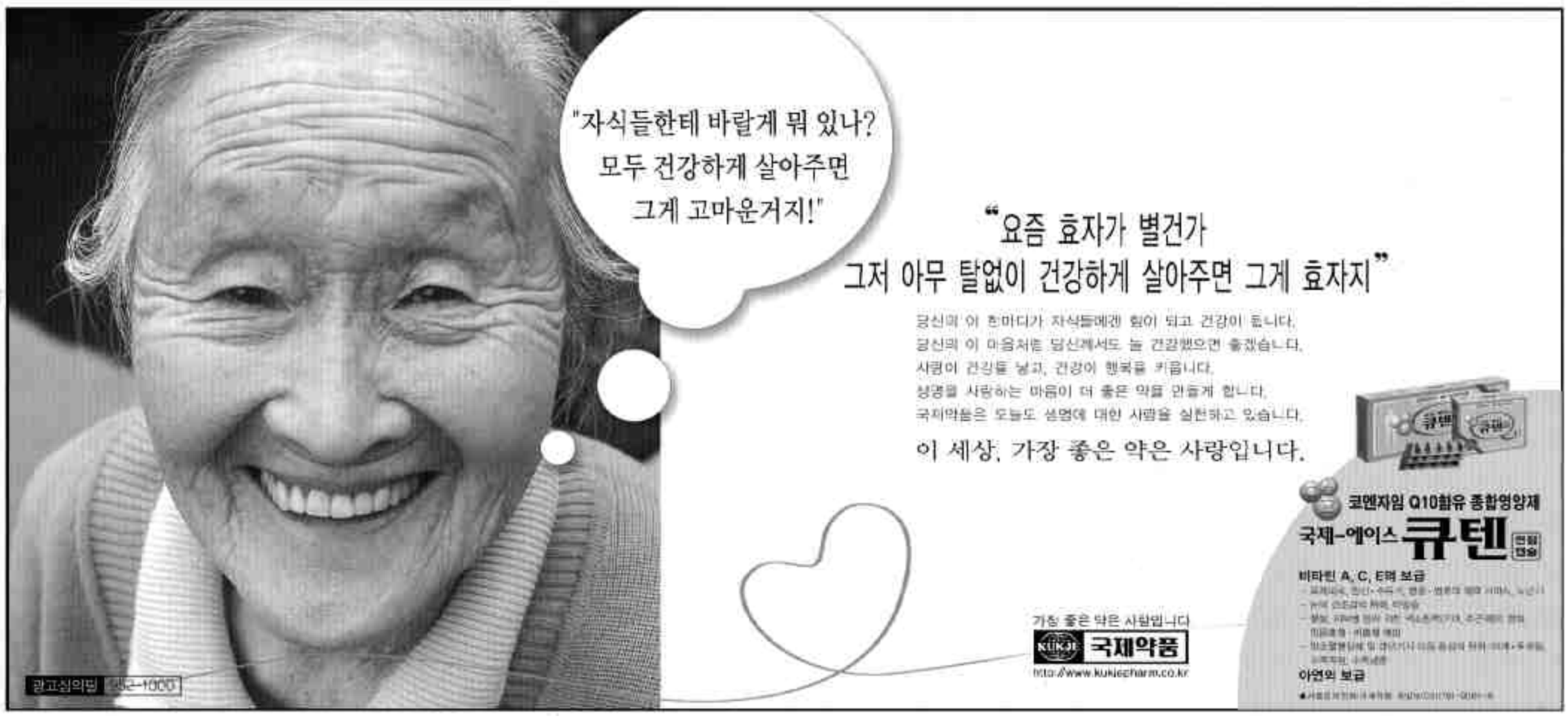
정부는 아울러 북핵 2·13합의와 9·19공동성명 등 북핵관련 합의사항도 합의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가국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통일부 "금강산 사건은 남북간에 풀어야할 문제"

통일부는 29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관련, "이 문제는 국제공조나 냉전시대 대결의 문제로 분석하고 얘기하는 차원 이전의 문제"라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금강산 사건을 국제무대에서 풀어가는 것이 남북이 외교전을 벌이던 냉전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강산 사건은 군인이 치마를 입은 여성 민간인에게, 추정으로는 조준사격을 한 사건"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로 가져갈 생각이 없고 남북간에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제사회 여론이 악화되고 국제사회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지난 27~28일 정부합동조사단이 동해안에서 실시한 모의실험 결과가 금주중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청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故) 박왕자씨의 이동거리 측정 실험, 탄도 및 사격 실험 등을 실시했다. /연합뉴스